

# OECD 개발글로벌포럼 개최 결과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OECD 개발글로벌포럼은 2008년 12.8~9일 양일간 파리에서 개최되어, 원조효과성 제고 방안 모색과 국제 금융위기 하에서의 개발금융에 대해 논의하였다.

## I. 배경 및 개요

OECD 개발글로벌포럼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와 개발센터(DC) 공동주최로 OECD 회원국 및 13개 비회원국, 세계은행, IMF, WHO 등 국제기구 대표 약 150여명 참석하여 2008.12.8~9 양일간 파리에

정책워크숍 및 정책대화의 형식으로 개최된 개발글로벌포럼은 공여국간 원조분업 및 상보성 향상 등 원조효과성 제고 방안 모색과 국제 금융위기 하에서의 개발금융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정책 워크숍에서는 전반적으로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AAA)에서 도출된 합의 및 공여국간 원조분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있어 수

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및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각(일본, 미국 등)과 원조 파편화(fragmentation) 및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여국간 비교우위에 중점을 두어 원조 정책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시각(EU 등 유럽국가)간의 입장 차이를 노정하였다.

그리고 Eric Martin OECD개발센터 의장(주 OECD 스위스대사)과 Eckerhard Edutscher DAC의장 공동사회로 개최된 ‘금융위기 하에서의 효과적인 개발금융 방안’에 대한 정책대화에서는 아직도 전개되고 있는 금융위기가 이전의 금융위기와는 달리 선진국에서 시작되어 개발도상국 및 신흥 경제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II. 상세 회의 결과

### 1. 정책워크숍(12.8)

: 원조효과성 이행 상보성과 원조분업 향상

#### 가. 원조분업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보완성

(Presentation: 아프리카 개발에 있어  
동아시아적 교훈 활용)

일본의 오노(Izumi Ohno) 교수는 공여국간 협력은 다양성과 보완성에 기초해야 하며, 각 공여국간 비교우위가 상이하므로 수원국의 총체적 원조효과성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특히 각 공여국간 원조정책에 대한 견해 및 접근법이 상이하여 상호 대체가 불가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원국 스스로 발전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개발(development)이 가지는 정치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발원조의 '동아시아적 접근법(East Asian Way)'을 제시하고 여타 발전모델과의 상호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본이 제시하는 개발에 있어서의 동아시아적 접근법의 핵심요소로는, ① 각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대한 우선순위, ②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공공지출에 대한 역할, ③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표준적 방법론 적용가능성 등이다.

아울러, 오노교수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동아시아적 접근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수원국의 국가비전에 기반한 원조 제공임을 강조하면서 명확한 국가비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정책 대화를 통해 국가비전 수립을 지원해야 하며 이와 같은 비전에는 수원국 자체적 발전전략, 핵심 인프라 구축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나. 아크라 이후 개발협력분야에서의 원조분업

(Presentation: 아크라 이후 원조분업에  
대한 진전사항)

Andreas König 정책보좌관(독일 개발부)은 원조 효과성 향상의 필수요소(파리선언 및 아크라행동계획의 핵심요소)로 원조분업 및 보완성을 주장하고, 특히 공여국간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 선택 및 역량집중화를 통한 원조분업은 원조 파편화 감소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하였다.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은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핵심원칙으로 '분업에 기초한 조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아크라 행동계획은 공여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우선순위를 존중하며 원조분업이 원조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아크라 라운드테이블 원조 조화 논의시, 공여국간 원조분업 관행이 체계적으로 점검되고, 성공 사례들이 유용한 수단으로 제시되며, 원조분업의 진전상황과 성과를 측정할 방법론 개발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었음을 상기하고, EU차원에서 ① 원조분업에 대한 신속절차 적용, ② 신속절차대상국가에 대한 원조분업 모니터링, ③ 위임된 협력의 활용강화, ④ 원조분업에 대한 EU의 toolkit사용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을 상술하였다.

EU는 EU개발정책의 보완성 및 분업에 관한 지침(EU Code of Conduct)에서 11가지 지침 원칙을 제시하고 동 원조분업 관련 지침은 효과성·효율성 제고 및 거래비용 절감을 통해 연간 600억불이 넘는 EU국가의 ODA 개발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EU 측은 공여국간 파편화 감소와 원조제공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론적 간의 균형이 향후 과제라는 점을 인정, 일본측이 제시한 동아시아적 접근법과의 절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OECD/DAC Task Team의 향후 업무로 ① 수원국내 원조분업에 대한 모범사례 정립, ② 수원국내 원조분업에 대한 수량적 진전사항 평가 체제(qualitative assessment of progress)구축, ③ Organise outreach and establish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platform, ④ 국가간 원조분업 및 보완성 관련 정책대화 추진을 제시하였다.

## 다. 원조분업 향상

Brian Hammond OECD개발협력국 원조체제 담당관은 원조분업 관련 주제발표에서 15개 아프리카 수원국들은 국가당 평균 24개 이상의 공여국과 협의하면서 원조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원조정책의 파편화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공여국 개발원조의 집중도를 검토해 볼 때, 프랑스가 123개 수원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 100개국, 벨기에 83개국, 덴마크 71개국 등 원조제공의 분산화 현상이 심각하며 특히 아프리카 주요 수원국 5개국의 국별 프로그램원조(CPA)에 있어 15개 공여국이 각각 10%미만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등 원조 파편화도

매우 심각하여 개발정책의 조정 및 조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한 국가당 CPA의 최대 34%에 해당하는 원조를 제공, 공여국의 원조집중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프랑스는 원조분업에 대한 이슈를 원조 소외국(aid orphan)의 관점에서 생각할 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원조분업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취약국가의 경우, 한 국가에 많은 공여국들이 원조를 제공한다고 하여 소규모 공여국들에 대해 원조철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가간 원조분업은 개별 수원국당 공여국의 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과 중요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원조분업 논의는 다양하고 많은 행위주체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하며 우선순위 결정 및 국제원조체제 전반에 대한 매핑(mapping)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2. 정책대화(12.9)

### : Delivering Effective Development Finance

#### 가. Session1: 글로벌 경제 위기의 결과

1) IMF 전략평가 담당관인 Hugh Bredenkamp은 식량위기 및 유류가격 상승으로 이미 타격을 입은 저소득국가들(LICs)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보다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전제한 후, 각 국가별

로 충격의 전달경로(transmission channels)와 취약성이 직·간접적으로 다양하지만, 총론적으로는 선택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고 종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원조규모 확대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2002년 이래 보다 향상된 원조정책, 전 세계적 성장기조, 외채탕감으로 인해 2007년도 저소득국가(LICs)의 성장률은 8.5%(2002년 5.5%)로 향상, 인플레이션은 6.5%로 저하, 재정적자는 5.25%로 저하, 외채비율은 GDP대비 30%이하(2002년 45%)로 저하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었으나, 상금의 금융위기로 인해 저소득국가의 심각한 경기후퇴가 우려되며 ① 저소득국가의 경기부양 정책을 주요 경제국에게 위임, ② 경기 역행적 원조 제공, ③ 인플레이 통제기능 강화, ④ 사회 보호망에 대한 지원강화 등 저소득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2) Jeffery Lewis 세계은행 수석자문관은 세계경제가 이미 심각한 경기 하락기에 진입하였으며, OECD국가들의 경우, 경기후퇴와 심각한 실물경제 혼란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을 발표하였다. 내년도에는 1982년 이래 최초로 국제무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며, 신흥시장의 외환보유고 감소, 부동산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 지속, 원자재가격의 심각한 등락이 원자재 수요국가뿐만 아니라 공급국가에도 큰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개도국에 대한 경제, 금융위기 전이경로(crisis transmission channels)를 ①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임금과 고용에의 영향, ② 성장동력인 투자의

급감, ③ 해외송금의 감소 ④ 재정원충장치의 약화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책으로 ① 경기 역행적 정책(counter-cyclical policies)도입, ② 노동집약적, 무역관련 인프라 투자확대, ③ 교역비용의 절감정책(policies to reduce trade costs), ④ 저소득국가의 외채관리 시스템 지원, ⑤ 저소득국가 금융위기에 대한 다자적 정책 대응강화, ⑥ 섬유, 의류, 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 내지 자유시장 정책 유지 등을 제시하였다.

3) OECD 개발센터의 Helmut Reisen 연구과장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채널 즉, ① 무역(문순효과)의 과정에서 영향을 받거나 ② 환율 하락, 교역 적자 등등 재정적 문제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③ 외부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전염되는 경로를 제시하고, 현재의 위기는 지불능력(solvency)위기라기 보다는 유동성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이에 적합한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현재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①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적 관행 축소 ② 미국 금융가 영향력 축소 ③ 신용평가기관의 영향력 축소 ④ G8 및 하인리켄담프로세스(HDP)의 영향력 축소가 필요한 반면, ① 국제개발금융기구(MDBs)의 역할 강화 ② G20의 기능 강화가 요청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나. Session2: 국제적 금융위기와 정책대응에 있어서의 시사점

1) Amar Bhattacharya, G-24(Intergovernmental Group of Twenty-Four on International Monetary Affairs and Development) 사무국장은 상금의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 정부 및 다자기구의 대응방안 마련과 더불어 다자개발금융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G20체제가 정식으로 G8+5체제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현장화(constituted)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향후 7년간 국제개발금융체제(IFIs)의 지분을 조정 등 일련의 개혁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OECD는 국제금융위기와 관련 전략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동 행동계획은 미시(micro), 거시(macro), 구조분야(structural)를 망라하고 있으며, OECD 경제검토체제, 금융시장 규제제도, 거시경제구조 개편, 금융 위기 원인진단 등을 2009년 상반기까지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개발협력 측면에서 각 수원국의 필요자금 규모 측정도 병행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2) Debapriya Bhattacharya 주 WTO 방글라데시대사는 현재 금융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필요성을 제기하고, 만약 현 위기가 유동성 위기라면 정치적 지도력 위기를 수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상금의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으며, 하나는 DC프로세스(G20+IMF+WB)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주권 국가가 참여하는 NY프로세스(UN중심)라고 하면서 NY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

명하였다. 그리고 각 정치그룹(EU, G77, G20 등)간 집단적 교섭 필요성을 피력하고 아울러, 오는 4월 EU총회, G20정상회의 등을 리더십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조정 체제 구축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이에 대해 S. Manservigi EC 개발총국장은 글로벌 거버넌스 구도는 G20+가 적절하며, 122개국 이상이 참여하여 또 하나의 UN총회를 만드는 방안은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현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개발측면에 있어 중요한 분야는 기후변화 적응, 식량 및 에너지위기 대응, 개도국에 대한 금융의 흐름, 이민정책, 평화관련활동 방안의 수립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국제금융시스템의 규제 및 감독기능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위기관리 체제로서의 국제금융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상금의 금융위기에서 ODA가 빈곤국가의 정치체제를 지원하고 외부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안전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Ⅲ. 평가

글로벌 포럼에서는 국제적 원조분업 논의에 있어 각 공여국들간의 비교우위 분야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조정을 본격 추진하자는 EU적 시각과 수원국의 필요 및 선택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일본식 접근법이 보다 효과적인 원조방법이라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 정립과 2010년 DAC가입, 2011년 HSF-4유치 추진을 감안한 전략적인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국제 금융위기가 최빈개도국(LDC's) 및 취약국가(fragile states)에 주는 단기 및 중장기적 영향에 대해 DAC를 비롯한 Development community가 아직까지 명확한 분석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상당히 관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올해 3월말 원조효과작업반 논의시 지적기여(intellectual contribution)차원에서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HIR-4유치에 대한 지지확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개발금융섹션에서는 OECD 회원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가, IMF, 세계은행의 고위 관계자 등이 참여, G8(또는 하인리켄담 프로세스)에서 G20으로의 글로벌 거버넌스 중심축 재편문제, 금융위기의 원인과 다자개발금융체제의 기능개편 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전반적으로 G20 체제를 기본도구로 하면서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주권국가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내세를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OECD 내에서 G20논의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